

칼럼

“사회 복지는 당장의 복지이고,
건설 인프라는 미래의 복지이다”

김용수 | 중앙대 건설대학원 원장

바야흐로 정치 시즌이다. 지난 4월의 총선에 이어 12월의 대선에 의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당내 경선을 위한 유세와 복지에 대한 말잔치가 화려하다. 지난 총선시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여야에서 주장하는 대로 복지를 한다면 1년에 67조여 원이 더 필요하고, 5년 동안에는 약 340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수준이라고 한다.

매스컴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도 국토해양부의 경우는 올해 예산 대비 약 11.2%나 감소될 것이나 보건복지부 예산은 6.7% 정도 증가될 것인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복지와 인프라 건설 투자의 전도 관계를 더욱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새 시장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 결과는 기존 SOC 사업들의 폐기, 축소, 지연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복지와 건설 인프라 투자는 서로 반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복지와 건설 인프라는 같은 복지의 개념이다. 사회 복지는 당장의 복지이고, 건설 인프라는 미래의 복지이다. 건설 인프라가 무엇인가? 이들은 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등으로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다. 이들이 잘 갖춰지고 정비되어 있으면 국내의 투자가 늘고 그 결과 우리의 직장이 생기고, 시간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사용자 전체의 부가가치가 증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의 평균 교통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당연

히 동남아 지사 등을 설립할 외국사가 서울로 더 많이 오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서울의 직장 수 증가, 서울시의 세수 확대, 서울시민의 시간 효율성 제고로 사용자 모두의 소득 증대로 연결될 것이다.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건설 인프라 투자야말로 더 크고 확실한 복지가 아닌가?

그렇다고 사회 복지는 덜 중요하고, 건설 인프라는 더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둘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같은 복지 개념이라는 것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대립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 복지를 늘리면 다른 부분의 축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개는 건설 인프라 사업이 희생양이 된다. 같은 복지 개념으로 본다면 한 쪽의 희생에 의한 조정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이다. 현재와 같은 인구 변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향후 20여 년은 총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남북한 통일 등을 고려하면 도시 인구는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인프라 확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인프라 투자는 아직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판단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와 건설 인프라는 같은 복지의 측면에서 합당한 조화와 밸런스가 필요하고, 국가와 지자체들의 예산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CERIK